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실태

신 기 현*

1. 세계화, 국제화와 국제교류

1993년 이래로 정부 일각에서 "세계가 우리를 요구하고 있고 세계속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세계화 장기 구상이 발표되면서 세계화니 국제화니 하는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고 있다.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세계화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부처마다 세계화 추진에 따른 부서를 설치하는 등 많은 혼란을 야기한 것도 사실이다.

한때는 세계화와 국제화에 대한 개념 정의조차도 하지 못한채 우왕좌왕하기도 했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국제교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자치단체가 세계를 무대로 하여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의 국제교류가 무엇을 의도하고 있고, 어떠한 실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1) 자치단체 국제교류: 점(點)의 교류에서 면(面)의 교류로

우리는 <세계화>에 대해 21세기 세계중심국가로 부상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국가 장기 발전 목표이자 한국과 한민족의 번영을 위한 발전전략으로서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여 세계변화에 적응하고 세계경영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나가는 과정" 정도로 정리하고 있다.

*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겸 지방자치연구소 연구원

이와는 별도로 <국제화>란 “인간과 물자 및 화폐, 정보 등 그리고 이러한 것의 총체로서의 문화가 국경을 초월하여 상호 침투하여 결과적으로 국가간 상호의존성이 깊어지는 과정”을 의미한다.

국제교류를 국제화와 동의어처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국제교류>는 외국과의 의식적인 관계 형성으로 일컬어진다. 국제교류는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갖는 국가 내지는 민족이 가장 마찰이 적은 방식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다. 즉 국제교류란 국제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일종의 방책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국제교류란 사람, 물자, 돈, 정보의 상호교환을 말한다. 외교가 국가와 국가간의 법률적 계약 사항의 결정이며, 친선은 상호 접촉의 기회를 가지는 상호간 경의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국제교류는 국경을 초월한 행동과 활동을 의미한다. 외교가 중앙 정부에 한정되는 것에 비하여 국제교류는 지역사회내의 모든 단체와 계층이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 경제적 수단과 함께 문화적인 수단까지 망라하는 종합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수년간 정부도 이러한 국제교류의 지속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제교류재단>과 <국제협력사업단>을 설치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국제교류 정책을 펴내고 있다. 아울러 자치단체들도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을 설립하여 도교와 뉴욕에 지사까지 설치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개별적인 수준에서 일부 자치단체는 협력 도시에 주재관을 파견한다거나 현지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국가나 중앙정부가 전담하던 것처럼 보여지던 과업들이 왜 지방의 업무로 변해가고 있는가?>

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즉 국가간 상호의존성이 증대되는 과정에서 국가 사이의 경계가 얽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경이라는 장벽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무국경화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지역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국제화 시대에 지방과 도시들이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국제무대에 나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오늘날에 있어서 국제교류의 실질적인 주체는 지역과 지역이 되었고, 여기서 지방의 국제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과거의 <국제교류는 대체로 3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되고 있다:

첫째, 수도에 있는 중앙정부나 외교관이 전적으로 수행하는 일극집중형 내지는 점(點)의 국제교류이다: 둘째, 기업 등의 생산자나 자치단체의 공무원 등 지역의 엘리트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일종의 다극분산형 내지는 선(線)의 국제교류이다: 셋째, UR이 상징하는 것처럼 외교관이나 기업 등 엘리트층을 중심으로 한 교류차원을 넘어 주민의 일상 생활 그 자체가 국제화의 열풍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모든 지역사회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와 있다. 즉 단순한 선이 아닌 면(面)의 국제교류 내지는 전면분산형 국제교류 단계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면의 단계에서는 특별히 훈련받은 적이 없는 일반 주민이 그 주역이 되고, 이에 대한 서비스는 그 면을 관장하여 경영하는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2) 자치단체 국제교류의 목적과 전제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효과>는 중앙정부의 외교활동을 보완하고 충실하게 지원해줄 수 있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최근 들어 민간의교니 자치단체외교니 하는 말들이 사용되기까지 하는 것은 바로 풀뿌리 국제교류가 국가간의 외교 못지 않게 중요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방화의 경향은 세계화 경향과 연계되면서 국제교류와 같은 국경을 넘어서는 교류를 단순히 중앙정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 스스로 개척해가야 한다는 사고를 확산시키고 있다. 자치단체 차원의 국제교류가 증대되는 과정에서 도시와 자치단체의 독자성이 강조되는 것은 물론이고 동시에 지역의 기업과 시민 등 광범위한 분야의 동참과 분담이 강조되기에 이르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국제교류를 통해 ① 국제화 시민의식 함양, ② 능동적인 국제교류협력, ③ 문화관광도시 조성, ④ 외국인의 편리한 도시 조성, ⑤ 국제 대회(행사)사업의 유치, ⑥ 수출 및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의 국제화, ⑦ 국제화 기반시설 확충 등을 끌어가자는 것이다.

과거 국가 차원의 국제교류는 독자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다자적인 입장에서 국제질서나 세계평화에 대해 기여하는 형태로 추구되어 왔었다. 이러한 국제교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스스로의 기술이나 정보를 활용하여 여러나라의 모든 지역과 독자적으로 국제교류를 추진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이념>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가 있을 것이다:

- ① 자치단체간 공생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국제교류
- ② 지역의 주체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 ③ 자치단체 교류를 통한 국제평화 기여
- ④ 지역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협력
- ⑤ 주민참가형의 폭넓은 협력활동
- ⑥ 상대 지역의 요구에 부응한 세심한 협력

결국 <자치단체 국제교류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제, 문화 등의 교류를 통하여 주민 생활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국가간의 정치-경제-문화의 격차와 마찰을 해소하면서 지구촌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역 차원에서 국제교류에 관심을 갖는 것은 지역의 진흥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자치단체가 국제교류를 보다 바람직하게 추진하기 위해 어떠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는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가 있다.

먼저 <행정의 역할>이다. 국제교류는 장기적으로 볼때 시민의 건전한 상식을 바탕으로 민간부문이 그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민간만으로 주도하기 어려운 여건에서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자치단체의 지원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자치단체 조직 자체가 국제교류의 최대 생산 환경으로 작용해야 한다.

국제교류의 일선에서 그 교류를 촉진시키는 것은 공무원이다. 이러한 교류를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기는 아직은 이른 시점이다. 굳이 비교하여 논의한다면 일본의 자치단체는 조직이 움직이는 반면, 한국의 자치단체는 몇몇의 적극적인 사람만이 움직이는 수준이라는 점이

다. 몇몇 사람만이 움직이니 교류는 자칫 몇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로 끝나버릴 뿐 조직으로 파급되지 않을 수가 있다. 이 과정에서 전달받은 자료나 정보까지도 개인 차원에서 사장되어 버린다면 우려할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대체로 공무원은 하나의 자치단체에 채용되는 경우 평생을 자치단체와 더불어 살아가게 되어 있다. 사실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역의 얼굴은 공무원 자신의 얼굴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시점에 와있는 것이다. 이 경우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지역주민의 이익 차원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또 하나의 준비 사항은 <조직 측면>의 문제이다. 일반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에 국제교류를 전담하는 계나 과가 존재하고 국제교류 사업에 대한 종합 조정이 가능한 조직이 존재하며, 국제교류의 경직성을 보완하는 제3섹터격인 국제교류협의회나 국제정책연구회 등을 설치하여 각종 조언을 하는 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교류정보>에 관해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우리의 자치단체들은 외국의 특정 자치단체 운영 사례가 성공적이라고 하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그 쪽으로만 연수를 가는 경향이 없지 않다.

가능한 한 좋은 사례를 배우자는 취지는 이해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특성은 모두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국제교류를 지역의 활성화라는 목표 하에 추진한다고 하면 교류 상대 지역도 이러한 목표에 부합하는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지역개발의 정보나 기술을 습득하려면 유사한 입지 환경의 지역을, 그리고 농산물의 판매를 위한 것이라면 같은 품목의 농산물이 생산되지 않는 곳을 선택해야 한다.

아울러 공무원이나 의원 모두와 관련하여 해외 연수를 가는 경우에 무엇을 위하여 왜 가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해 구체적인 사전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 연수 대상 지역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이다. 한 걸음 나아가 공무원이나 의원들의 연수가 주민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마지막으로 <지역 환경>의 문제이다. 국제교류란 공무원 조직이나 공적인 차원에서만 수행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 점에서 국제교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가야 한다. 자치단체의 국제교류와 관련하여 지역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혹은 전국적으로 특정 집단이나 조직에서 자원하여 동참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나 지역 자치단체에 연수나 조사차 방문하는 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의원 혹은 기업인들이 해당 지역 정보에 밝은 인적 자원을 사전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다(대학, 상공인, 다른 자치단체 경험).

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도 이러한 국제교류에 관한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인력 양성에 눈을 돌리고 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한다. 외국어고등학교나 외국어(전문)대학의 유치, 혹은 대학내 이러한 유관 학과에 대한 지원 등이 어느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는가가 바로 중요한 환경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국제경제, 정치외교, 국제관계, 지방자치, 외국지역학, 외국어).

2.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실태:

1) 개별자치단체의 지역 및 도시 교류

1995년 6월 현재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표 1>과 같이 전세계적으로 193개 지역 자치단체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상대국의 자매결연 지역을 살펴보면 미국에 56개, 일본에 54개, 중국에 23개, 대만에 9개 등으로 미국, 일본, 중국(대만 포함)에 73.6%가 집중되어 1994년 72%에 비해 더욱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특히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진 데에 그 원인이 있다.

이러한 자매결연과 기타의 교류를 포함한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실태는 아래 <표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의 자치단체들이 국제교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외국의 지역들은 총 259개 지역에 달하고 있으며, 시도 차원에서는 서울이 가장 많은 교류 지역을 보유하고 있다.

시군구 차원에서는 총 230개 시군구 중에 123개 시군은 외국 지역과의 국제교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 자치단체의 국가별 자매결연 현황(1995년 6월 현재)

권역 및 국가명		계	시도	시군구
아 시 아	일본	54	11	43
	중국	23	9	14
	대만	9	3	6
	인도네시아	3	3	-
	카자흐스탄	2	1	1
	기타	3	2	1
유 럽	프랑스	3	1	2
	러시아	6	4	2
	벨기에	2	-	2
	기타	10	3	7
북 미	미국	56	16	40
	캐나다	3	1	2
중 남 미	브라질	4	3	1
	멕시코	3	2	1
	기타	5	1	4
기 타	호주	5	2	3
	뉴질랜드	2	1	1
계		193	63	130

〈표 2〉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도시(지역) 현황(1995년 12월)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도 차원 교류	79	14	12	4	9	4	4	6	6	2	3	2	4	3	3	3
시군구 차원 교류	180	26	10	4		1	2	27	16	7	15	9	13	21	26	3
계	259	40	22	8	9	5	6	33	22	9	18	11	17	24	29	6

전체 시군구	230	25	16	8	10	5	5	31	18	11	15	14	24	23	21	4
미교류 시군구	123	5	7	5	10	4	4	14	10	7	7	10	15	14	10	1

비교적 유적지가 많은 경주시의 경우 외국의 6개 지역과 교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전혀 교류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교류에 대한 여건이 성숙되지 못했던 점과 단체장들이 소신껏 일할 수 없었던 점과도 무관하지만은 않다.

이 점에서 볼 때 직선단체장 등장은 이러한 기초단체들의 국제교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기초단체들의 국제교류가 각각의 지역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검토와 준비는 치밀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정보를 토대로 이 분야를 개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체로 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행정기관의 노력, 민간 주도, 재외 공관 및 정치인 등의 소개에 의해 시작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제는 직선 단체장 등장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국제교류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면서 자치단체 주도의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2) 다자적 자치단체협의체 교류

(1) 서울시의 BESETO 전략

서울시는 동북아권역의 형성이 단기간내에 곤란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서울(Seoul), 동경(Tokyo), 북경(Beijing)을 연계시켜 개발시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3도시의 공동협력을 상징하는 합성어로 다가오는 21C아시아·태평양 시대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韓·中·日의 수도(서울·북경·동경)가 중심이 되어 동북아 주요 도시간의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협력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BESETO 협력망은 도시 당국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이 공동 참여하는 종합 협력망으로 종래의 도시외교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입체적 협력이 될 것이며, 양자간 협력에서 다자간 협력으로 전환됨으로써 개방적이고 폭넓은 협력기반을 구축하자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인천시의 INTIDE 전략

인천시는 기술력과 노동력, 자원을 하나의 고리로 연결, 도시간 공동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는 인천(Inchun)의 기술력, 천진(Tianjin)의 노동력, 대련(Dairen)의 자원을 연결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1993년 천진시와, 1994년에는 대련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다자적인 국제교류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3) 환동해권 4개국 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

1994년 11월 강원도 속초시에서 동북아시아 4개국 「환동해권 지방정부 지사. 성장회의」가 개최되었는데 해당 지역의 지사와 성장들이 참여하였다. 이 회의에 참여한 자치단체는 다음과 같다.

한국: 강원도
일본: 돗토리현
중국: 길림성
러시아: 연해주

여기서는 환동해권 지역간 교류의 현상과 과제에 대해 각 지방정부의 입장과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지금까지의 쌍무적 관계를 다자간 협력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방안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아 <강원도 4자회의 개요>라는 공동발표문 형식의 합의문을 채택하였다. 이 합의는 우선 이러한 회의를 정례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원도 측에서는 이 회의를 발전시켜 환동해권의 다자간 협력기구로 만들겠다는 구상인데, 이 경우 지방단위국제기구의 지방의 국제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4) 한일해협 7개시도현지사 교류회의

한일해협을 사이에 둔 양국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

하여 구성된 이 협의체는 1991년 6월 일본 북구주지역 3현이 구상하고 일본 자치성이 이를 수용, 우리 내무부에 제의하여 성사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한일 협력위원회가 많은 역할을 하였다.

1992년 8월에 제1회 회의를 제주도에서 개최하였고, 그 후로는 지역을 번갈아가면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다음과 같다.

- 한국: 부산광역시
경산남도
전라남도
제주도
- 일본: 福岡縣(구주의 정치.경제 중심)
佐賀縣(구주지방 곡창지대)
長崎縣(수산.조선.관광산업지)

회의체 운영은 매년 국가를 순회하면서 지사회의를 개최하고 지사회의에서 제기된 각종 제안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매년 실무국장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현재 제안되어 추진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는 청소년교류사업, 수산관계교류사업, 환경교류사업, 연구기관 연합체 구성, 광역관광루트개발, 지역상품 전시회 등이며, 기타 도시간 개별교류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5) 동아시아(환황해)도시회의

동아시아지역 중에서도 황해-남해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의 주요도시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991년부터 개최되었는데 처음에는 경제전문가 세미나를 중심으로 하였고, 점차 환경전문가 세미나까지 확대하였다.

이 협의체는 1991년 일본의 北九州(키타큐슈)시와 下關(시모노세키)시, 한국의 부산시와 인천시, 그리고 중국의 청도시와 대련시가 참가하여 6도시 경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6도시간에는 부산↔하관↔청도, 인천↔북구주↔대련시간 서로 자매관계를 맺고 있는 인연으로 맺어졌다.

1993년에는 전문가끼리의 각종 연구결과 및 제안이 실행상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여 시장회의로 이어가는 것을 모색하였다. 그리하여 회의체의 운영과 관련하

여 시장회의는 격년제로 개최하되, 1996년부터 시행키로 하고 국과장급의 실무자 회의는 매년 개최하되 94년부터 6도시가 알파벳순으로 순회하면서 개최키로 하였다.

그리고 실무자회의에서 중국의 천진(天津)과 연대(煙台)시를 가입시켜 3국 8개 도시의 명실상부한 다국적간 거대 지역공동체로 이어지게 되었다. 현재 동아시아(環黃海)도시회의에 참여하는 자치단체는 다음과 같다.

한국: 부산광역시
인천직할시

일본: 下關市
北九州市

중국: 大連市
清島市
天津市
煙台市

3) 자치단체 교류의 주요 내용

(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교류

국제적인 공무원 교류는 공무원들의 어학 연수, 선진행정 습득, 국제교류의 창구 역할 수행 등 여러 모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미 일부 자치단체들에서는 관광, 도시, 교통, 환경, 청소년, 주택, 수산 분야 등의 공무원 정기 교류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류는 1~2년간의 파견 근무나 단기 파견 시찰 등 여러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서의 연수도 적극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파견이나 연수 등의 관리는 특정인에 대한 봐주기 식이 아니라 지역사회 차원에서 필요한 교류나 정보의 습득에 주안점을 두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유학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론과 문제를 동시

에 경험할 수 있는 자매도시 파견 근무도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 편이다. 아울러 유학이나 파견 근무를 거친 공무원 중에서도 그들의 경험이 국제교류 분야에서 제대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었던 것이 과거의 실태였다.

(2) 지방의원 교류

지방의원들의 국제교류는 지방의 국제화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지방의원들이 각급 자치단체의 시책이나 예산 결정과 관련하여 가장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것과 관계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한국의 지방의원들이 교류 차원에서 공식적인 외국 방문을 하는 경우는 점차 증대되고 있다.

특히 지방의 국제교류가 증대되면서 지방의원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의회 구성 초기의 단순한 견학 및 관광위주의 여행 수준에서 점차 실질적인 교류 활동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다.

(3) 국제교류관련 조직

전국 시도에는 국제교류나 통상에 관련된 조직이 <부록>에 나타난 표와 같이 되어 있었다. 최근 내무부에서는 지방기구-인력의 효율적 재조정과 관련하여 국제통상분야는 강화되어야 할 분야라고 권고하고 있다. 1995년 12월 시점에서 볼 때 대부분의 시-도는 국제통상(협력)실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제교류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군구의 경우에는 전담 조직과 인력이 없이 총무나 내무 등의 과에서 업무가 발생할 때마다 형편에 따라 수시 처리하고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4) 지역 상공인 및 민간교류

민간교류는 넓은 의미에서 민간인의 일반적인 외국여행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개인 목적에 따른 상공인들의 교류보다는 개인 차원의 단순한 여행 목적이 아닌 상호 초청으로 이뤄지는 일종의 공공 목적을 지닌 상호교류를 중심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교류는 주로 사회단체들의 경우이다. 지금까지 주요 사회단체 교류

는 청년회의소·라이온스클럽·적십자회·관광협회·로타리클럽 등의 수준이었으며, 최근 들어서는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과 국제적인 연대가 강화되면서 이러한 운동 차원의 교류도 적극 권장되고 있다.

자치단체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제교류가 형식적인 교류 차원을 떠나 실리를 추구하는 경제교류쪽으로 변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자치단체를 통한 지역중소기업 및 상공인의 국제교류가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에 대한 전략 마련이 바로 자치단체들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5) 해외 시장 개척 및 투자 유치

자치단체 국제교류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문제이다. 특히 직선 단체장 시대에 들어와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작업은 해외시장 개척이나 해외 자본의 유치 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중앙정부의 각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자치단체는 경쟁적으로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은 〈상품전시회〉, 〈사무소 설치〉, 〈외국 지역 공단 조성〉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해외자본 유치〉 노력도 가시화되고 있다.

3. 자치단체 국제교류의 문제점: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국제화 수준은 아직은 높은 수준이 아니다. 많은 부분의 국제교류라고 하는 것도 외국의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그러한 자매결연 조차도 실질적인 교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신한은행 부설기관인 신한종합연구소가 1993년말 우리나라의 국제화 수준을 산업, 금융, 생활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분석한 한국의 국제화 수준에 따르면 종합적인 국제화 수준은 미국을 100으로 했을때 30에 불과하며 일본에 비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수치는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가장 국제화된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결과로 기타 다른 지역의 국제화와 이를 위한 국제교류 수준은 더욱 뒤떨어질 수 밖에 없다.

자치단체가 본격적으로 국제교류에 눈을 뜨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많은 자치단체에는 그 <지역의 문제를 가지고 외국인에게 상담을 해줄만한 전담요원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국제교류를 부르짖으면서도 1년에 한두차례 해외시장개척단을 구성하여 간헐적인 시장개척에 나서는 것이 고작이었다. 특히 기초단체로 갈수록 교류 여건은 열악해지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UR협상 타결에 따른 국제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기획관리실장을 책임자로 하는 국제화기획단을 설치하고 외국 현지에서 무역, 투자유치, 관광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발빠른 동작을 보이고 있다.

하나의 사례로 한일해협연안 7개 시도현지사회의에서 합의된 각종 사업과 연구기관 연합 체결 등 의욕적인 국제교류가 돋보이고는 있지만 이를 추진할 전문인력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국제교류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인력양성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다양한 동기를 부여해 지방공무원의 국제감각을 길러주고 직무와 관련된 선진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중장기 연수기회를 넓혀야 한다. 행정의 국제화없이 외국인 투자나 무역거래에서의 불필요한 행정적 규제가 사라지지 않는다.

자치단체의 국제교류를 증대시키는 노력에 장애가 되는 것 중의 하나로 <지역경제의 낙후와 열악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공항 및 항만시설확충에서부터 대규모 국제회의장을 갖추는 것 등 국제화에 대비한 하드웨어를 대폭 늘리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지역경제계도 외국바이어들에게 소개할 상품 카탈로그 하나 자체 제작하지 못한채 전문기관에 의뢰할 정도로 자치단체들의 국제화 경험이 부족한 실정이다.

자치단체별 국제교류 환경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외국기관이 지역에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따라서도 그 환경은 달라진다>. 현재 광주-전남지역과 대구-경북지역에는 광주아메리칸센터(미국문화원)가 설치되어 있다. 부산의 경우에는 지난 92년에 개설된 러시아, 중국영사관 등 외국 영사관만 4개소에 달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4개 문화원이 상주하여 각종 국제정보의 습득과 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많은 자치단체들은 외국기관이 단 하나도 없

어 외국정보를 구하기 위해 서울 등지로 찾아다녀야 하는 등 지역내 국제접촉이 불가능해 외국기관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아울러 각기 지역별로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지만 외국인 안내센터 하나 없는 경우가 태반이고 지역내 외국인 거류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많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부문별 국제교류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지적하고자 한다.

1) 지역 및 도시 교류와 문제점

지역 및 도시 교류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하는 방식이 바로 자매결연 방식이었다. 자치단체 국제교류의 대중을 이룬 것도 사실은 자매결연 방식에 의한 것이었다.

과거에 추진되었던 자매결연과 운영의 주요 문제점을 지적하면 첫째, 자매결연을 위한 정보 부족, 둘째, 자매결연의 계획적 추진 미흡, 셋째, 자매국가의 편중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볼 때 자매결연 체결을 위해서는 관계 도시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 관계 수립이 필수적이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신뢰 관계를 수립하는 데는 상대방에 대한 적절한 자료가 있어야 하나 과거의 예로 볼 때 충분한 자료를 입수하기가 어려웠고, 이러한 자료를 제공하는 정보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 정상적인 교류 관계로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충분한 검색이 가능하고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행착오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보다 구체적인 경제 및 기술 교류 등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와 계획이 보다 충실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와 함께 아직까지도 미국, 중국, 일본 등에 치우치는 결연 형태를 탈피하여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유럽국가나 다른 지역 국가들의 자치단체와도 교류를 활성화시켜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치단체들끼리의 치열한 경쟁은 일부 자치단체를 소외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자치단체들의 국제정보 교환을 위한 국내 차원의 내부 조정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 자치단체 교류별 문제점

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교류

자치단체 공무원은 민간단체, 민간인에 대하여 각종 정보를 제공해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국제교류 활동의 장을 제공하는 등 지역 국제화를 위한 역할 수행에 앞장 서야 한다. 이들의 국제교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 동안 자치단체 공무원의 국제교류와 관련하여 지적되어온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수 기회의 부족>이다. 최근 들어 자치단체 공무원의 장단기 연수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공무원에 비하면 매우 적은 편이다. 특히 그러한 연수 기회조차도 단체장을 비롯한 상위직·특정부서 근무·어학 등 특수능력을 지닌 공무원들에 그치는 경향이 있는 점을 지양하여 가능한 한 연수 기회의 의무화와 이에 따른 공무원들의 어학 연수 강화를 강조해가야 할 것이다.

둘째, <연수 과정에 대한 준비 부족>을 들 수 있다. 치밀한 기획하에 연수 경로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곳을 방문하여 무엇을 익힐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없이는 교류의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준비 과정에서 최근의 인터넷 정보는 매우 효과적인 정보 공급원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셋째, <연수 공무원 및 연수 자료의 활용 미흡>도 문제점이 되고 있다. 공무원 연수나 파견의 결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수 공무원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다. 내부적인 정책 자료 발굴이나 기타 공무원과의 정보 경험 공유야 말로 교류의 취지를 확산시켜가는 지름길이라고 할 것이다.

2) 지방의원 교류

지방의원들의 해외 교류 역시 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지역산업체의 해외진출을 모색한다거나 외국 산업체의 지역 유치 등도 추진할 수 있는가 하면 지방의원 자신의 국제역량도 강화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방의원의 교류에서 지적된 문제점은 대체로 연수 과정 혹은 교류 프로그램 준비의 불충실 및 전문성 미흡으로 요약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극복은 의회 자체의 보완과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전 자료 검토 등 공무원의 경우와 비슷한 방식을 통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3) 국제교류관련 조직

자치단체의 국제화 및 국제교류 증대와 관련하여 조직이 적정하지 못하다거나 전문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매우 빈번한 편이었다. 특히 시군구의 경우 대부분 이러한 전담 부서를 두고 있지 않은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제교류나 정책에 관련된 업무가 일원화되고 있지 못한 것도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문화, 관광, 경제, 농업별로 모두가 국제교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국제교류에 관한 전반적인 기획과 정책 조정은 단일 부서에서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제교류나 협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단체장이나 책임자에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국제교류 업무를 집행하는 방식도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어떠한 자치단체든 조직 개편과 예산 지원을 통한 국제교류 효과가 바로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서 점에서 성급하게 결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꾸준히 예산을 지원하는 전략이 추구되어야 한다.

4) 지역상공인 및 민간교류

앞으로의 국제교류는 지방대 지방의 교류로 발전해야 하고 지방의 국제교류는 궁극적으로 지역주민간의 교류이므로 민간차원의 국제교류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지역의 민간교류는 아직도 소수의 지역엘리트에 의한 교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국제교류에 있어 일반 지역주민이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과제라 할 것이다.

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국제적인 교류로 발전되는 것이

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특정 집단의 공식적인 교류가 주조를 이루어왔다. 특히 국제교류라고 하는 것도 행사 위주에 그치고 그 효과가 주민들에게 파고 들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 점에서 지역주민이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매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민 교류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가 있다. 이를 테면 자매지역 주민 친선모임이나, 지역내 청소년 교류, 대학생 교류 지원, 대학별 자매결연 유도 등으로 교류 효과가 지역 사회에 널리 퍼지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더 나아가 실질적인 경제교류로 이어가는 데 있어서 지역상공인의 교류는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지역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자치단체가 만족할만한 정보를 제공하느냐가 관건이다.

4.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방향과 방법

<자치단체 국제교류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가 있다.

첫째, 행정의 제반 제도는 행정 풍토가 우리의 자치단체와 비슷한 여건이면서도 긍정적으로 발전되어 있는 국가의 제도를 검토, 수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행정서비스 등 행정기관이 안고 있는 현안 사업은 자치단체 교류를 통해 그 경험을 터득해갈 수가 있다. 이 점에서 자치단체 공무원의 파견 근무나 연수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둘째, 다자적 자치단체간 공동협의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적 대응력 향상 및 민간차원에까지 교류를 확대해 간다. 자매도시 체결이 개별도시간 친선, 협력 우호 증진을 도모한다면, 다국적 자치단체간 공동협의체 참여는 한꺼번에 많은 도시-자치단체간 교류를 가능하게 한다. 자치단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현재 일부 자치단체는 1개 혹은 2개의 공동협의체 참여를 통하여 교류 여건을 확대시켜가고 있다. 협의체식의 교류가 공동사업을 통하여 자치단체의 경제, 행정, 문화, 스포츠 등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자매도시간의 교류-협력의 증진이다. 교류가 전혀 없는 타도시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세계 속의 자치단체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시민의 날 행사 혹은 특정 대회를 계기로 자매도시의 단체장을 초

청, 구체적 교류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아울러 자치단체 <국제교류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중심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국제교류 기반 조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교류 및 협력 지원제도의 보완, 국제연구강좌, 국제교류상공회의소 개설 등을 추진할 수가 있을 것이다.

둘째, 국제적인 문화교류를 증대시킨다. 이를 위한 국제교류센터를 설치하고 각종 국제적인 행사나 대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셋째, 국제생활에 기여하는 국제교류를 추구한다.

넷째, 국제산업을 확충해가는 국제교류로 발전시켜간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기업과 사무소, 기관 등의 유치, 무역회사 지원, 국제적인 행사 유치, 해외주재 사무소 활용 등이 필수적이다.

지방차원의 <국제교류는 구체적인 시책을 토대로 해야>한다. 우선 민간교류 측면에서 도시간 친선시민의 모임 운영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민간 예술단의 상호 방문 공연, 야구 등 스포츠팀 교환경기와 민박 관광 알선 등이 그 예이다. 그간 중앙정부가 주도해온 경제 협력까지도 자치단체에서 떠맡을 때가 왔다.

또한 지금까지는 학술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던 자치단체의 준외교권 문제도 적극 제기될 필요가 있다. 일부 지방자치 선진국에서는 지방정부에서 직접 해외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국가외교활동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로서는 우선 지역교민이 많이 진출해 있는 해외도시에 현지 교포를 시민외교사절로 위촉해 지방자치, 경제, 과학기술, 문화 등의 교류를 주선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급변하는 세계조류는 더 이상 우물안에서의 안주를 용인하지 않는다. 사회주의 체제붕괴, UR협상타결로 세계는 이제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블록화가 가속화되면서 각 나라마다 세계화에 적응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이같은 흐름을 잘 적응하느냐 못하느냐는 곧 부응하느냐 쇠락하느냐의 문제로 직결된다.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국제화를 추진할 것인지 각론부문을 완성, 보다 효과적인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의 국제교류를 단순한 친선 수준에서 성숙된 단계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방향 전환이 모색되어야 한

다.

첫째, <폐쇄적인 사회구조를 개방화시켜야> 한다. 특히 지역차원에서라도 외국인의 취업이나 투자에 대한 여건을 개방적인 환경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둘째, <세계가 필요로 하는 한국, 그 중에서도 특정 자치단체라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셋째, <국제교류의 대상을 미국과 일본 중심에서 동남아나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까지 다양하게 확대시켜가야> 한다. 국제교류 대상은 반드시 우리보다 앞선 나라에게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뒤진 국가에도 관심을 기울여 깊은 신뢰를 쌓아가는 작업이 필요한 실정이다.

넷째, <일과성에 그치는 국제친선이 아닌 지속적인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야> 한다.

다섯째, <국제교류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어학 연수, 문화 이해, 국제자원봉사 참여 등 실제 체험할 수 있는 수준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자치단체 국제교류 사례〉

1. 광역자치단체 통상 교류 사례

- 1) 자매도시와 비즈니스 파트너 교류
- 2) 무역센터, 종합전시장, 해외상설판매장 설치
- 3) 경제정보화 사업, 통상정보의 보급 및 홍보 지원
- 4)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
- 5) 국제통상업무의 연구개발
- 6) 지역수출산업의 국제기반 강화
- 7) 해외시장개척 수출진흥기금 조성, 수출 능력 증대
- 8) 해외교포 무역주재관 위촉 운영
- 9) 해외시장 동향설명회 개최
- 10) 무역학교 운영을 통한 중소기업의 실무 능력 강화, 인력 양성
- 11) 농수산물의 해외시장 진출지원
- 12) 자치단체장의 상품 품질 인증제 도입
- 13) 자치단체별 무역회사 설립 운영

2. 일본 나가노현(長野縣)의 국제교류

나가노현은 젠코우사(善光寺)와 마쯔모토성(松本城), 그리고 온천 등이 즐비하여 일본의 알프스로 불리는 곳이다. 이 곳이 199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면서 나가노는 1998년 2월 7일부터 16일간에 걸쳐서 개최될 올림픽을 위하여 현민이 단결하여 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나가노현에서 추진 중인 국제교류에 대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온정있는 대접은 인재육성으로부터〉

“겨울과 친구되어 세계의 사람들과 만나고 싶다” 이것은 이 지역의 국민학생들이 올림픽을 계기로 세계의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식으로 국민학생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국제교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올림픽에 자원봉사 프론티어로서 참가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현내외는 물론

론 해외로부터 모여 약 32,000명에 달하였다고 한다(1995년). 각국으로부터 방문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주민들이 그 나라의 언어는 물론 문화와 실습까지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나가노현에서는 올림픽에서 활동할 국제교류 프론티어 육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992년부터 실시된 국제교류 프론티어 양성강좌는 올림픽 개최시기까지는 3,000명 이상을 수료시켜 외국에 대한 이해와 따뜻한 마음으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프론티어로 육성할 계획이다. 나가노현에서는 일본의 외국청소년초청사업(JET)의 국제교류원 13명을 배치하고 있는 외에 현 독자적으로 5명을 채용하여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일상 생활의 국제화를 추진해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외국의 동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초청하여 지도를 통한 기술 향상 도모 뿐만 아니라 교류를 통한 외국 이해에도 앞서가고 있다.

〈지역별 국제교류활동 확대〉

국제교류 활동은 지역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로 확대되고 있는데 각국의 요리와 놀이, 퀴즈 등을 통하여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함께 즐기면서 세계를 향한 시야를 넓혀 가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림픽 개최 중 문화 프로그램 일환으로 국제 자매도시 교류 축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각국 선수 및 대회 관계자의 나가노 방문은 물론 자매도시의 문화교류를 나가노에서 개최함에 따라 나가노를 무대로 한 세계의 민속음악 및 예능공연을 통하여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상호교류를 깊게 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국제교류단체의 추진 사업〉

현내의 국제교류단체에서는 “나에게는 나가노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를 구호로 내걸고 올림픽 참가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가노현 국제교류추진협회에서는 홈스테이 프론티어 및 통역 프론티어의 등록과 알선 등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한편 유학생축제 등의 국제교류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주민과 외국인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이 외에 러시아어 등 외국어 강좌를 개강한 단체, 민박을 접수하고 있는 단체, 통역 프론티어를 파견하는 단체 등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하여 올림픽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려는 분위기가 현 산하 각 지역에서 확대되고 있다.

〈21세기, 세계 속의 나가노현을 꿈꾸며〉

이와 같이 나가노현은 2년 후에 다가올 올림픽의 개최를 목표로 현민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올림픽은 단순히 16일간의 축제가 아니라는 것이 나가노현의 입장이다. 세계와의 교류를 위해 국제교류 프론티어를 많이 육성하고 수많은 친구를 만들어 나가노현 국제교류의 초석을 다지려고 하는 것이다.

3. 경남의 국제교류 현황

경남의 10대 중점사업은 △(㉞)경남무역 진흥△중국 산동성 경남전용공단 조성 △거제권세계적 관광단지 건설 △지리산권 국민휴양관광지 조성 △남해안 관광 일주도로 건설 △김해 국제규모 유통단지 건설 △경남신용보증조합 설립 △경남 수출농단 조성 △기업영농회사 확대△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등이다.

〈경남무역 설립〉

94년5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민·관 공동출자로 설립된 (㉞)경남무역은 도내 농민단체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에 크게 기여해 도민의 기업으로 성장,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농산물 수출만 연간 800억원의 목표를 설정한 경남무역은 1995년에는 세계최대의 농산물 수입국인 일본시장 공략에 나서 경남도정 사상 최대인 3천5백63만 달러어치의 농·수산물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1억5천2백92만달러 상당의 획기적인 상담실적을 올리고 까다롭기 이를 데 없는 일본시장의 수출길도 열었다.

경남무역은 96년 농공산품 수출전략으로 일본 오사카, 러시아,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6개국에 경남 농·수산물과 공산품 상설전시 판매장 개설에 이어 국제박람회 본격 진출, 통상거점 확보 등 수출을 촉진시킬 야심찬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중국내 전용공단 건설〉

지난 92년 한·중수교 이후 국내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착수한 중국 산동성 경남전용공단 건설은 경남산 농·공산품의 중국시장 진출의 전진기지 확보와 도내 중소기업의 활로 개척을 목표로 하고 있다.

94년 8월 양국 도·성간 경제교류와 우호증진협약 체결에 이어 착공된 경남전용공단은 산동성 경제특구인 위해시에 76만3백㎡, 교남시에 89만2천5백㎡ 등 모두 1백65만2천8백㎡로 95년말 기반조성사업이 마무리도 돼 경남지역 중소기업의 진출이 본격화 되고 있다.

50년 사용조건으로 계약된 산동성 경남전용공단은 울산시 세운공업이 중국 흑

표자동차와 합작계약을 체결, 위해공단 67만5천m²에 대단위 공장건립을 통해 연간 30만대의 농용자동차를 생산, 중국시장에 경남산 자동차가 본격 진출하게 되었다.

산동성공단 분양 실적은 위해공단 100%, 교남공단 75%로 이미 경남지역의 11개 업체가 입주해 가동 중이다. 금년 들어서도 많은 업체들이 입주를 신청하는 등 투자채비를 서두르고 있어 경남 중소기업의 경제활성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거제권관광단지 개발〉

경남이 2000년대 급증할 세계적 관광수요에 대비, 거제시를 제2의 제주도로 개발하는 거제권 세계적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중국, 일본, 홍콩 등의 외국관광객 유치에 겨냥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한려해상국립공원 천혜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660여만m²에 호텔, 카지노, 골프장, 컨벤션센터 등을 갖춘 라스베가스식 종합위락단지로 개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의 투자비는 1조3천억원으로 경남개발연구원이 일본 닛코대학과 미국 RTKL사로부터 자문을 받아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문화체육부의 관광지개발 사업 승인에 이어 건설교통부의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을 받아 1996년부터 실시 설계사업에 착수, 1997년에 본공사가 착공될 전망이다.

4. 지방자치단체들의 무역회사 설립

지자체 실시 2년째를 맞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무역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1994년 5월 가장 먼저 문을 연 경남도의 경남 무역이 상당액의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고, 이미 뉴욕과 도쿄, 오사카에 지사를 설치하였으며, 오사카에는 경남농산물전시장을 개설했다.

1994년9월 경북도가 설립한 경북통상은 1995년 약 1천8백만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렸는데 일본에 전량 수출한 송이버섯이 6백만달러를 넘은 것을 비롯, 일본으로 항공수출된 오이의 수출도 두드러졌다. 지역적으로도 베트남과 스리랑카에 중고자동차와 냉장고를 수출하였고, 동남아 12개국에 각종 농공산품수출이 1백80만달러에 달하는 등 국제화 현상이 돋보였다. 한편 일본 오사카와 서울 KOEX에도 전시판매장을 열어 수출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1995년초에 시작한 제주도의 제주교역도 1995년 약 19억원(약2백45만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렸다. 미국과 캐나다에 7억원(90만달러) 상당의 감귤을 수출한

것을 비롯, 일본에 수출한 표고버섯 등 임산물이 약10만달러, 돈육을 비롯한 축산물이 약 14만달러에 달했다. 이중 러시아에 양배추와 양파가 수출되어 수산물 전체 수출량 5만달러보다 두배나 많은 약 10만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들 선발업체들의 활동과 함께 전남 및 전북도 각각 전남무역과 전북무역을 설립하면서 자치단체간 무역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5. 외무부의 자치단체 통상외교 지원

외무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외경제, 통상활동과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데 앞장 설 것으로 보여진다. 외무부는 자치단체의 대외경제, 통상활동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청취하고 전세계 1백41개 공관망을 활용해 자치단체의 세계화와 국제교류 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민-관협조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외무부는 문화협력국 홍보과를 실무지원부서로 하고 내무부 및 지자체직원을 파견받아 지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지원단은 현재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파견하고 있는 국제관계자문대사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자체와 재외공관에 대한 외무부의 대외창구역할도 맡게 된다.

6.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세계무역기구 출범 등 개방화 추세에 자치단체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5개 시·도 및 2백60개(현재는 2백30개) 시·군·구가 공동으로 기금(총61억원)을 출연해 만든 기구가 바로 자치단체국제화재단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업무 지원을 위하여 각 자치단체 공동출연으로 1994년에 설립된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은 국제자매교류를 알선하거나 지원하고 있고, 한일지방자치단체 교류회의, 아태지역 자치단체 국제교류회의, 주한 외국사무소 대표와의 교류회의 등을 개최해왔다.

국제화 인재육성과 관련하여 자치단체 공무원의 해외연수, 자치단체경영행정과정 지원, 해외지방행정 연수과정 참여, 순회 강연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자치단체의 해외활동 지원과 외국의 행정사례, 자료 수집, 현지 자치단체와의 협조를 위해 해외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다. 현재 일본과 뉴욕에 사무소가 설

치되어 있으며, 파리스사무소도 개소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해외 사무소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는 재단의 업무 추진을 도울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명예해외주재원을 운영하고 있다. 명예해외주재원은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교포나 유학생 중에서 위촉하고 해외정보 수집, 자치단체의 교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96년 3월 15일에는 대전에서 "해외시장개척 우수사례발표회"를 개최하여 다변화되고 있는 해외시장 개척 사례 발굴에 나서고 있다. 전국 15개 광역단체에서 제출된 사례 중 서류심사를 거쳐 당선된 6편이 발표되었는데 이 발표회에서는 대구시가 대상을 받은 바 있다.¹⁾

-
- 1) 이날 발표회에서는 대구광역시(중유럽시장개척단), 충북도(물산전개척), 전북도(뉴욕 특산물수출 시장개척단), 전남도(농산물 대일수출촉진단), 대전광역시(피혁제품 공동상표개발), 경기 김포군(동남아 시장개척단) 등 6개 자치단체가 각각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대구시가 대상을 받았는데 대구시는 까다로운 중유럽시장에 지역중소기업체가 생산하는 안경,자전거등 특화산업 상품을 중심으로 시장개척에 나서 상담 4천7백만달러 계약 1천만달러의 실적을 올린 공이 인정돼 수상했다.
- 〈〉 대구광역시=시장개척 활동에 앞서 현지 KOTRA를 통해 입수한 바이어수탁 조사 자료를 토대로 사전에 상담업체를 선정했다. 현지에서는 시장이 직접 공장을 방문해 개별상담을 추진하고 현지시장을 만나 한국업체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 개척단활동시 상담을 한 바이어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관리를 하고 쿼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섬유업체를 위해 시장이 직접 샘플을 주며 제품의 우수성을 알렸다. 이후 지난 연말부터 상품선적에 들어갔는데 일부업체는 매일 반복주문을 받고있다.
 - 〈〉 충북도=일본의 야마나시현과 맺은 행정적인 자매결연을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경제 무역관계로 확대시켜 성사시켰다. 지난해 11월10일부터 14일까지 충북도전행사를 하면서 상품판매뿐만 아니라 투자설명회, 특산물 전시판매, 국악공연 홍보사절단 활동 등을 동시에 전개했다. 양국간 문화, 행정 절차 등의 차이로 의견 절충이 어려웠으나 끈기 있는 추진으로 무역관계로 정례화시켰다.
 - 〈〉 전북도=뉴욕시장에 대한 수출여건을 사전조사하고 뉴욕한인 추석맞이 행사기간을 이용해 농특산물시장개척단을 파견, 현지에서 TV와 라디오 대담 등을 통해 우리상품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했다. 또 도지사는 식품관련 바이어를 초청해 수출상담회를 갖고 뉴저지주 상의를 방문해 교류협회의와 투자유치 설명회도 직접 주선했다. 특히 영양표시가 없는 포장식품의 통관을 미국세관과의 협의를 통해 설명서와 제조공정표 제출로 대신하기로 하는 성과를 올렸다.
 - 〈〉 전남도=무역관련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지않고 도자체 국제통상협력실의 공무원만으로 해외시장개척촉진단을 편성해 활동을 벌였다. 전남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상품홍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도지사가 인정한 농산물인증서 제시로 원활한 판매활동을 펼쳤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오이, 방울토마토 등 12개품목에 대해 연간 4천3백75만달러의 계약고를 올렸고 펠저펜무역상사 등과는 양파 2백50t, 밤호박 1백30t의 계약재배를 성사시켰다.

또한 많은 시·군·구의 홍보팸플릿을 영어와 일어로 번역해주고 있다.

국제교류와 관련하여 그 동안 국제교류 정보가 분산되었던 것을 재단 설립으로 정보를 공유하게 됨으로써 지금까지 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외국의 특정 자치단체들을 중복 방문하여 야기하는 예산낭비·국가이미지 훼손 등의 부정적 현상을 줄이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아울러 자치단체들이 효율적으로 세계 각지의 최신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천리안에 CUG(KLAFIR-NET)를 구축하여 통신망을 통한 국제교류 정보 공급에 나서고 있다.

7. 국제고 신설 등 교육의 국제교류 강화

지역의 교육제도 국제교류 관련 교육정책을 강화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1997년 개교를 목표로 국제 외교무대에서 활약할 전문가 양성을 위한 특수목적고인 가칭 '대구국제고'를 신설키로 하고 설계 용역과 부지 매입에 필요한 35억원을 1995년 추경에 반영하면서 구체적인 운영 방안과 교육과정을 연구할 설립추진위를 구성한 바 있다. 국제고는 남녀 공학으로 1개 학년에 6학급씩 모두 18학급 540명에게 국제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 필요한 언어, 역사 등의 기초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경북도교육청은 구미에 외국어고를 신설하여 1996학년도 신입생을 이미 선발하였다.

이와 함께 교육관계자들의 해외교류도 활발해지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1995년 1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통합교육구와 교육, 학예교류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
- 〈〉 대전광역시 = 대부분 OEM으로 수출해온 지역 피혁업체들이 얼굴있는 상품판매를 위해 공동브랜드를 개발, 수출에 나서고 있다. 지난 해 부운물산, 한일, 원진산업, 윈스포츠 등 4개업체가 참여 "세누피" 공동브랜드 개발에 성공했다. 카탈로그를 해외에 발송하고 일본, 독일, 이태리 박람회에도 참가해 좋은 반응을 보여 현지인들과 대리점 개설 등을 협의 중이다. 올 상반기에는 법인을 설립하고 해외수출망을 확대해나간다는 구상이다.
 - 〈〉 경기김포군 = 군단위에서 하는 해외시장개척단 활동으로 경험이 부족하고 참여업체 부족으로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우선 지역산업구조와 비슷한 동남아지역을 개척단 활동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이에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해나갔다. 참여를 꺼리는 업체에 대해서는 군수가 직접 방문, 설득을 통해 개척단 파견을 성사시켰다. 이 결과 말레이시아가 차선 도색업체인 광성라인에 대해 현지법인설립을 요청해와 추진중이고 한라식품은 인도네시아의 식품회사와 합작투자를 추진키로 했다.

샌프란시스코 영어교사들이 대구에서 영어교사들을 상대로 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

경북-대구의 경우 서울-부산보다는 늦었지만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국제화에 걸맞는 인재 양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위해 부심하고 있다.

8. 인터넷을 통한 국제교류

각 자치단체들이 국제교류를 촉진시켜가는 수단으로 가장 손쉽게 채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터넷 활용이다. 이미 많은 자치단체들에서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특산품 홍보, 각종 국제적 행사 홍보 등 각종 자료를 공급할 계획들을 세우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국제교류는 전세계에 걸쳐 24시간 행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충남은 최근 조성사업이 본격 진행 중인 천안3공단내 외국인 전용공단의 입주업체모집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도 인터넷을 통해 적극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단체들이 어떻게 인터넷을 활용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거추장스럽지 않으면서도 많은 정보, 매일 새로운 국제교류 정보의 입력 및 제공, 지역 업체나 상품의 전시는 필수적이다.

통상 및 관광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함께 해외수요자 및 공급자간의 유기적인 정보교류를 원활하게 하고 이를 경제교류에 연계되도록 하는데는 각 조직별로 세부적인 계획과 검토가 필수적이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하위 메뉴별로 각 업체나 단체들의 홈페이지를 개설해 그들의 개황과 개황과 제품카타로그를 칼라사진과 움직이는 화면, 소리까지 제공하는 경우 화면에서 주문과 이에 대한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9. 국제적인 행사 및 대회의 유치

〈'2000년 아시아유럽회의(ASEM:Asia European Meeting)를 잡아라'〉

이는 최근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지역개발을 노려 회의장소 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서면서 일궈어지는 구호이다. 일단 이 회의가 유치되면 정부지원 속에 지역개발을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국제회의를 지속적으로 유치, 관광수입의 확대가 예상

되고 국제홍보에도 큰 도움이 되는 등 부수되는 이점이 많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에서는 외무부 주관하에 총리를 위원장으로, 재경원부총리를 부위원장으로 관련부처 장관들을 위원으로 하는 ASEM준비위원회와 준비기획단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을 의결,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는 곳은 광역자치단체 4곳과 기초자치단체 2곳 등이고 그 중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제주도이다.

제주도에서는 3월 8일 도지사가 직접 청와대와 관련 부처를 방문 기초-광역단체관계자 전원이 서명한 건의안을 전달하고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북에서도 지난 8일께 도지사 명의로된 경주시 유치 건의서를 청와대를 비롯, 관련 부처에 제출했다. 또 상공회의소, 관광개발공사 등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출신 중앙부처 요인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펴고 있고 시민공감대의 확산에도 힘을 쏟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ASEM회의를 유치키로하고 총 6천5백억원을 들여 일산 신도시 대화동에 전시장과 회의 시설, 호텔이 들어서는 <국제종합전시장> 건립을 오는 99년말까지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엑스포가 개최된 바 있는 유성구의회에서 "대전시가 세계화를 대비해 엑스포 국제전시장 자리 9만2천평의 부지에 컨벤션센터와 숙박시설, 문화공간 등의 건설계획을 이미 세워 놓았다"면서 청와대와 중앙부처에 유치를 건의했으며 민간단체인 대전개발위원회에서도 곧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서울의 관악구의회에서 이 회의 유치를 관련부처에 요구키로 했고 컨벤션센터와 호텔 건립을 위한 대상 부지의 공원용지 해제를 시에 요청할 예정이다.

강서구청도 당초 계획대로 마곡지구에 컨벤션센터 건립을 겨냥, 이 회의 유치를 시와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15개 시도의 국제교류 및 통상부서: 1995년 시점〉

시도명	담당부서명		
서울특별시	문화관광국	국제교류과	국제교류계
	산업경제국	상공과	지역경제계
부산광역시	기획관리실	국제협력담당관실	국제기획계
	국제통상협력실		행정담당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과	수출진흥계
대구광역시	국제통상협력실		국제교류계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과	통상협력계
인천광역시	국제통상협력실		수출진흥계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과	기획연구계
광주광역시	국제통상협력실		통상진흥계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과	수출지원계
대전광역시	국제통상협력실		국제기획계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과	수출진흥계
경기도	국제통상협력실		국제협력계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과	통상협력계
강원도	국제통상협력실		수출진흥계
	지역경제국	공업과	국제교류계
충청북도	국제통상협력실		공업통상계
	지역경제국	상공과	수출지원계
충청남도	국제통상협력실		국제교류계
	지역경제국	중소기업과	통상협력계
전라북도	국제통상협력실		수출지원계
	지역경제국	중소기업과	국제협력계
전라남도	국제통상협력실		국제통상계
	지역경제국	기업진흥과	통상진흥계
경상북도	국제통상협력실		통상지원계
	지역경제국	통상지원과	통상진흥계
경상남도	국제통상협력실		국제협력계
	지역경제국	통상지원과	통상정책계
제주도	국제통상협력실		수출지원계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과	국제협력계